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③ 15. ③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④

1. 정치의 의미에 대한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좁은 의미로, (나)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한다.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치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국가와 관련된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곤란하다.
-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하면 학생 자치회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하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하면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에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이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민주 정치 발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나)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를 시민들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국가 주요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근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 ③ 현대 민주 정치에서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 ④ 근대 민주 정치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 ⑤ 근대 민주 정치는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4.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한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므로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ㄱ. 다당제에서는 양당제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ㄴ. 양당제에서는 다당제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 ㄷ.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자를 임명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국무 총리 해임 건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② 국가 예산의 결산 심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 ④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6.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표자를 배출하는 등의 정치 총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의 실천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이익 집단은 공익의 실현보다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중시한다.
- ④ 정치 사회화 기능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수행한다.
-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7.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의 경우 (가) 시기에는 ‘여대야소’, (나) 시기에는 ‘여소야대’가 나타나며, 을국의 경우 (가) 시기에는 연립 정부, (나) 시기에는 단독 정부가 구성된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의 내

각 불신임권 행사 가능성은 단독 정부에서보다 연립 정부에서 높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 인물이다.
- ③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보다 '여소야대'일 경우에 높을 것이다.
- ④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행사 가능성은 단독 정부에서보다 연립 정부에서 높을 것이다.

8. 참정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공동체의 운영을 주도하는 국가 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통해 기본권 A가 참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은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 ⑤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9.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국가가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10.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거나, 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ㄷ. 주택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소유권 관련 사항이므로 등기부 압구에 기재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은 이사(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갖게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ㄹ. 갑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은행이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므로 ○○은행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11.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A는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갑의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지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경우에 계약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병은 갑과 도색 완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사용자 병은 피용자 정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정은 부주의로 갑 소유인 X건물의 창문을 파손하였으므로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3.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갑의 유언이 유효이면 재판을 통해 갑의 아들로 인지된 B도 법정 상속권을 가지므로 A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의 유언이 무효이더라도 갑의 양자인 A는 법정 상속권을 갖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A는 양자이지만 친양자가 아니므로 A와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ㄹ. 갑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을, A, B가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을이 A, B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게 되므로 을은 3억 원(= 7억 원 × 3/7), A와 B는 각각 2억 원(= 7억 원 × 2/7)씩 상속 받는다.

14.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국가, B는 초국가적 행위체이고,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

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국제 연합 총회의 표결 방식은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 ②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5. 근로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근로 기준법 상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갑이 을에게 매 근무일 21시까지 근로를 시키면 1주 연장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된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을 어기게 되므로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도 위법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9시간 일했다면 연장 근로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하루 임금으로 76,000원(= 9시간 × 8,000원 + 4,000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은 9시간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④ 근로 감독관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므로 근로 계약서의 근로 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
- ⑤ 1주간 개근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의 경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B의 경우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C의 경우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C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르.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 행위를 한 을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 ㄴ. 법원은 갑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로 보았다.

17.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할부 거래나 전자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는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 구매를 한 갑은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ㄴ. 을은 전동 키펠드 제동 장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기업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갑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따로 민사 소송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을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및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1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며, 당사국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② 조약은 체결 당사국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③ 국제 사회에 국제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 없다.
- 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정한 특정 사항에 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19.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 명령을 근거로 민사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인 남편의 경우 민사상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피의자인 남편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을 것이다.
- ②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의해 수사가 종결된다. 검사가 구속 기소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 절차가 종결된다고 해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선고 유예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가해자 측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선거 결과 분석 및 추론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행 선거구 확정 방식에 의한 결과 및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선거구 확정 방식에 의한 결과>

선거구	A1	A2	A3	A4
당선	갑당	을당	을당	을당
의석수	갑당 1석, 을당 3석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

1. a지역 및 B지역 확정 시 결과

(a1+a2)			(a3+a4)		
갑당	을당	병당	갑당	을당	병당
60+30=90표	30+50=80표	10+20=30표	20+10=30표	60+50=110표	20+40=60표
당선 : 갑당			당선 : 을당		

(a1+a3)			(a2+a4)		
갑당	을당	병당	갑당	을당	병당
60+20=80표	30+60=90표	10+20=30표	30+10=40표	50+50=100표	20+40=60표
당선 : 을당			당선 : 을당		

(B1+B3)			(B2+B4)		
갑당	을당	병당	갑당	을당	병당
120+20=140표	60+60=120표	20+20=40표	60+10=70표	100+50=150표	40+40=80표
당선 : 갑당			당선 : 을당		

* 단,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B1+B2), (B3+B4)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선거 결과 의석수

선거구	(a1+a2), (a3+a4) / (B1+B3), (B2+B4)	(a1+a3), (a2+a4) / (B1+B3), (B2+B4)
의석수	갑당 2석, 을당 2석	갑당 1석, 을당 3석

④ 을 정당의 경우 a1과 a2를 통합할 경우에는 2석, a1과 a3을 통합할 경우에는 3석을 차지하므로 a1과 a3을 통합하는 선거구 확정 방식이 유리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 정당은 득표율 33%(= 330/1000×100), 의석 점유율 25%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반면 을 정당은 득표율 46%(= 460/1000×100), 의석 점유율 75%이므로 과대 대표되었다.

② 개편안의 경우 a지역의 유권자 수는 400명, B지역의 유권자 수는 600명으로 B지역의 유권자 수가 더 많다. 그러나 a지역과 B지역에서 각각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a지역 유권자 의사가 B지역 유권자 의사보다 과대 대표 된다.

③ 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확정 방식에서는 1석, a1과 a3을 통합할 경우에도 1석을 차지하므로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확정 방식과 개편안에서 모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므로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